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목 차>

1.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2.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3. 임원 등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병과

금융위원회

##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김동현
	담당부서 (과)	자본시장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태현		연락처	02-2100-2654
	과장	박민우		이메일	econokdh@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자본시장법 제449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	증권사(54개), 운용사(138개), 선물사(6개) 등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	-
5. 규제 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해당사항 없음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현행 규제내용 <div>○ 기관(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등)에 대해 1천·5천만원, 개인(임직원등)에 대해 5천만원(임직원매매)의 과태료 부과한도 적용 - 업권 규모에 비해 과태료 부과한도가 낮아 제재 실효성이 저해되고 타 법 사례와 비교하여 제재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div>				
	<input type="checkbox"/> 강화 규제내용 <div>○ 과태료 부과한도를 2~3배 인상 - 기관은 현행 1천·5천만원에서 3천만원·1억원으로 인상 - 개인(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현행수준을 유지</div>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징수				

##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 과태료 부과한도를 2~3배 인상

- 기관(금융투자회사, 대주주등)은 현행 1천·5천만원에서 3천만원·1억원으로 각각 인상

\* 개인(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49조(과태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u>5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 ----- <u>1억원</u> ----- -----.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28.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삭 제>
28의2. ~ 49. (생 략)	28의2. ~ 49.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

현 행	개 정 안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u>1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7. (생 략)</p> <p><u>&lt;신 설&gt;</u></p> <p>18. ~ 19. (생 략)</p>	<p><u>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③ -----</p> <p>----- <u>3천만원</u> -----</p> <p>-----.</p> <p>1. ~ 17. (현행과 같음)</p> <p><u>1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u></p> <p>18. ~ 19. (현행과 같음)</p>

## 1. 규제의 필요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법은 86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한도는 1천·5천만원으로 제재에 부족한 수준

\* 자본시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15년): 총 28억원(110건, 건당 258만원)에 불과

- 자본시장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는 업권 규모\* 및 공정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

\* '15년말 기준 1사 평균 총자산 6.1조원, 당기순이익 570억원

\*\* 일반적인 법 위반: 최대 1억원, 조사 거부·방해·기피: 최대 2억

###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유지, 금융수요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위법·부당성 정도에 비례하는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

###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숨방망이 금전제재”가 사라지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대형 금융사고·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금전제재 금액이 턱없이 낮아 “숨방망이 제재”라는 비난이 많았음

⇒ 과태료 부과한도를 약 2~3배 인상함으로써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대

- 금전제재가 법률마다 상이한 문제가 해소되어 형평성 제고

- 법률마다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수준이 달라지는 문제

⇒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재가 부과되도록 법률간 제재 형평성이 제고

## 2. 대안의 발굴·검토

### 가. 고려된 대안

#### < 현행유지안 : 기존의 과태료 부과한도 적용 >

- ☐ 기관(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1천·5천만원

#### < 비규제대안 : 해당 없음 >

- ☐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규제대안은 상정하기 어려움

#### < 규제대안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

- ☐ 과태료 부과한도를 2~3배 인상

- 기관(금융투자회사, 대주주등)은 현행 1천만원·5천만원에서 3천만원·1억원으로 각각 인상

- 다른 금융업법(은행·보험업법) 간 제재 형평을 고려

- 개인(임직원 등)은 임직원매매 과태료 산정과 관련하여 자본 시장법시행령이 개정\*('15.3)되어 시행 중이므로 현행 유지

\* 다수의 동종 위반행위에 대해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해 오던 것을 위반행위 건별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을 5천만원에서 건당 2.5백만원으로 변경

### 나. 대안의 분석

####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대상이 아님

##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 실효성 있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님

## < 해외사례 분석 >

- ☐ 영국·미국 : 영국은 Financial Penalty, 미국은 Civil Money Penalty의 단일 구조로 우리나라의 과태료·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전제재를 부과

- 우리나라는 과태료·과징금이 적용되는 영역·부과요건·부과금액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
- 영국과 미국은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법령 또는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액부터 고액까지 부과 가능

- 영국은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으로 규정

- 미국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기간 1일당 상한액을 규정

\* 위반행위 1일당 (1단계) \$7,500 / (2단계) \$37,500 / (3단계) \$1,425,000

- ☐ 일본·독일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관련 법률에서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독일은 과태료·과징금을 구분하지 않고, Bußgeld라는 단일 금전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로 상한액을 설정(최대 100만유로)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과태료·과징금\*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최대 30억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

## < 타법사례 분석 >

### □ 공정거래법과의 비교

- 자본시장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는 공정거래법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

-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법 위반사항에 대해 최대 1억원,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해 최대 2억원의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

- 반면, 자본시장법은 최대 5천만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낮은 편

※ 한편,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위반)는 5천만원으로 타법 1천만원 대비 높은 수준

금융법			공정거래법	
구 분	금융기관	임직원	사업자	임직원
금융지주법	1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1억원, 2억원*	1천만원, 5천만원*
은행법	5천만원	1천만원		
자본시장법	1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위반)		
보험업법	1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 1억원/1천만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의무 위반, 기업결합 미신고 등  
2억원/5천만원: 자료 은닉·폐기,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 금융법 사례 분석

- ① 현행 금융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는 대부분 1천만원~5천만원으로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

\* 과태료 부과금액('15년): 기관 33.6억원(건당 12백만원), 개인 29.2억원(건당 5백만원)

⇒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법은 기관(금융기관, 대주주 등)은 1억원으로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개정안에 대해 동시에 입법 추진 중

②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상이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여 법률간 제재 형평을 제고

※ '14.1월~'16.2월, 지주, 은행, 보험, 자본시장, 저축은행, 여전, 신용정보, 전자금융 등 총 8개 법률 위반 과태료 607건 분석 결과, 개인에 대해 399건, 건당 1,073만원을, 법인(금융기관, 기업)에 대해 208건, 건당 2,225만원을 부과하여 부담능력 수준 고려시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 < 위임근거 검토 >

☐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 이해관계자 협의 >

☐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16.5.31 ~ 7.11)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는 타법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한도 상향 필요

#### < 결론 >

☐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규제대안은 그간 문제로 지적된 제재 실효성·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어 현행 유지안보다 유리

###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 ☐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제재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을 생략
- 규제비용은 규제순응에 대한 비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규제 불순응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되지 않음

####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 ☐ 금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것에 불과함
  - 또한,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인상된 부과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소요 없음

######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 자본시장법 상 과태료 부과사유 및 부과한도가 명확하고, 과태료 산정방식도 기존과 동일하므로 기술적 어려움 없음

######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 해당사항 없음

#####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 해당사항 없음

###### < 경쟁영향평가 >

- ☐ 해당사항 없음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 해당사항 없음

##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은 제재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금전제재로 제재의 중심축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일환
  - 규제대안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법률 간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 제재의 실효성·형평성 측면에서 현행유지안보다 우월
  - 행정집행력 투입 수준 대비 위반행위 억제력 등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의 효과 측면에서도 규제대안이 현행유지안 보다 우위
- ☐ 한편,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으로 인해 금융기관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
  - 업권 규모 및 타 기관 사례에 비해 경미했던 금전제재를 현실화 하는 수준이고
  - 과태료 부과한도의 인상 수준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 법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 과태료 부과한도를 약 2~3배 인상함으로써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
- ☐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재가 부과되도록 법률간 제재 형평성이 제고

##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16.5.31 ~ 7.11)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히 사항은 없었음

##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김동현
	담당부서 (과)	자본시장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태현		연락처	02-2100-2654
	과장	박민우		이메일	econokdh@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자본시장법 제349조제1항, 제428조제1항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금융투자 회사, 금융투자 회사 임직원 등	증권사(54개), 운용사(138개), 선물사(6개) 등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	-
5. 규제 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해당사항 없음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현행 규제내용				
	<div>○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6개 위반행위(종합금융 회사 1, 금융투자업자 5)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div> <div>* 예)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초과액 × 40%</div>				
	<input type="checkbox"/> 강화 규제내용				
	<div>○ 과징금 부과비율을 최대 5배 인상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이 최대 5배 이상 인상되도록 개정</div> <div>* 부과비율 인상예시 : 20% → 100%, 40% → 100%</div>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자본시장법 제349조제1항 및 제4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시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징수				

##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 과징금 부과비율을 최대 5배 인상

-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비율을 현행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의 100%'로 5배 인상
-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발행증권 취득 금지 위반, 특수관계인 발행증권 취득한도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및 종합 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비율을 현행 '위반금액의 40%'에서 '위반금액의 100%'로 2.5배 인상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349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u>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u>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49조(과징금) ① ----- ----- ----- ----- 신용공여액의 ----- -----.
<신설>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4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u>부동산 취득금액</u>

<p>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u>위반금액의 100분의 40</u>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2. 제3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u>한도를 초과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액</u></p> <p>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p> <p>-----</p> <p>-----</p> <p>-----</p> <p>-----</p> <p>-----</p> <p>----- 위반금액 -----</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	--

## 1. 규제의 필요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6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 부과되어 징벌·제재 효과 부족

○ 공정위·방통위 등 타부처에 비해 적은 금액이 산정되는 구조

\* '15년 과징금 부과실적 (1건당 부과금액, 부과건수)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1.5억원, 45건	78.2억원, 108건	7.2억원, 52건

※ '14~16.2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실적은 109건, 149억원이었으며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1.3억원 수준에 불과

#### < 과징금 산정방식 비교 >

○ 자본시장법

- ① 법정부과한도액 산정 (위반금액×부과비율)
- ② 법정부과한도액×기본부과율(7/10~7/160)로 기본과징금 산정
- ③ 가중·감경·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액 결정

$$\begin{array}{|c|} \hline \text{법정 부과한도액} \\ \hline \text{(위반금액} \times \text{부과비율)} \\ \hline \end{array} \times \text{기본부과율} = \begin{array}{|c|} \hline \text{기본과징금} \\ \hline \end{array} \pm \text{가중·감경} \\ \text{및 조정} = \begin{array}{|c|} \hline \text{과징금} \\ \hline \text{부과액} \\ \hline \end{array}$$

☞ 구체적인 위반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해 법정 부과한도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추가로 기본부과율을 곱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액이 줄어드는 구조

###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과징금은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 환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제재로서, 그 부과한도 등을 민간 자율에 맡기기 어려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

##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숨방망이 금전제재”가 사라지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대형 금융사고·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금전제재 금액이 턱없이 낮아 “숨방망이 제재”라는 비난이 많았음

⇒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현저히 적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대

### < 금융회사 과징금 부과 사례 >

① ○○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여 대주주등에게 약 130억원의 불법 신용공여로 금융회사의 부실을 야기하였으나, 부과된 과징금은 불법 신용공여액의 9% 수준인 12억원에 불과 ('12년)

②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대주주등 및 개별차주에 대하여 약 1,000억원 상당의 불법 신용공여를 하였으나, 부과된 과징금은 불법 신용공여액의 약 7% 수준인 67억원에 불과 ('13년)

③ ◇◇생명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상품 부당광고를 통해 해당 보험계약에서 7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수입보험료)이 발생하였으나, 부과된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8% 수준인 6억원에 불과 ('14년)

⇒ 주요국의 경우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로 위반금액 또는 부당이득의 10% 이내 수준에서 위반금액이나 부당이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

## 2. 대안의 발굴·검토

### 가. 고려된 대안

#### < 현행유지안 : 기존의 과징금 부과한도 적용 >

규 정	위반 행위	現 부과비율
§349①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20%
§428① 1호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40%
§428① 2호	금융투자업자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	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의 40%
§428① 3호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신용공여액 의 40%
§428① 4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 전체 한도를 초과하거나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40%
§428① 5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계열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신용공여액의 40%

#### < 비규제대안 : 해당 없음 >

- ☐ 과징금 부과한도를 인상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규제대안은 상정하기 어려움

#### < 규제대안 :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

- ☐ 과징금 부과비율을 최대 5배 인상

규 정	위반 행위	부과한도 인상
§349①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20% → <b>100%</b>
§428① 1호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40% → <b>100%</b>
§428① 2호	금융투자업자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	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의 40% → <b>100%</b>
§428① 3호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신용공여액 의 40% → <b>100%</b>
§428① 4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 전체 한도를 초과하거나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40% → <b>100%</b>
§428① 5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계열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신용공여액의 40% → <b>100%</b>

- 공정위·방통위와 같이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이 크게 인상되어 금융회사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현행 부과체계를 유지하되 부과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 나. 대안의 분석

###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 과징금 부과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과징금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대상이 아님

###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님

### < 해외사례 분석 >

- ☐ 주요국의 금전제재는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하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 '13년 미국 금융당국은 JP모건에 대해 신용파생상품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부적정 등 사유로 SEC가 \$2억(2천억원), FRB가 \$2억(2천억원), OCC가 \$3억(3천억원)의 민사제재금을, 영국 금융당국은 £1.4억(2천억원) 등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 JP모건은 이 외에도 '13년 부실 모기지 담보증권 판매 관련 제재금 \$130억(미 법무부), \$51억(미 연방주택금융청) 등 상당규모의 제재금을 부과 받음

- '13년 리보 조작과 관련하여 글로벌 IB인 UBS는 \$15억(1.5조원), RBS는 \$6억(6천억원)의 제재금을, BoA는 모기지 증권 부실 판매로 \$116억(12조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음

- '11년 미 SEC는 내부자 거래 관련 캘리언 펀드 설립자 라자라트남에 대해 부당이득인 \$5천만(5백억원)의 약 2배에 가까운 \$9천만(9백억원)의 제재금을 부과

⇒ 주요국은 금융법 위반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은 물론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 금전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빈번히 제기됨

## < 타법사례 분석 >

### □ 금융법 외 타 법(공정거래법·방송법) 사례 분석

#### ○ 공정거래법·방송법

①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부과기준율(3%)로 기본과징금 산정

② 가중·감경·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액 결정

☞ 위반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금액이 크게 증가

\* '15년 과징금 부과실적 (1건당 부과금액, 부과건수)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1.5억원, 45건	78.2억원, 108건	7.2억원, 52건

### □ 금융법 사례 분석

○ 현행 금융법 상 과징금 부과한도는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 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제재 효과 부족

⇒ 일반적으로 '법정부과한도액 × 기본부과율'의 구조를 취하며,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은 「법정부과한도액」을 약 3배 인상하는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 추진중

\* 예: 2%→5%, 10%→30%

※ '14.1월~'16.2월, 지주, 보험, 자본시장, 저축은행, 여전 등 총 5개 법률 위반 과징금 161건 분석 결과, 개인에 대해서는 14건, 건당 1,718만원을, 법인(금융기관, 기업)에 대해서는 147건, 건당 1.7억원을 부과하여 부담능력 수준 고려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 < 위임근거 검토 >

☐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 이해관계자 협의 >

☐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16.5.31 ~ 7.11)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현행 과징금 금액 금융기관의 법률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도 상향이 필요

### < 결론 >

☐ 과징금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규제대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금액에 대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여 위규행위 억제 측면에서도 현행유지안 보다 유리

###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제재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을 생략

○ 규제비용은 규제순응에 대한 비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규제 불순응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되지 않음

####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 ☐ 기존의 과징금 산정체계 하에서 과징금 부과 비율만 인상하면  
되므로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 소요는 없음

######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 현행 과징금 산정체계에서 부과비율만 변동하는 것으로  
기술적 어려움 없음

######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 해당사항 없음

#####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 해당사항 없음

###### < 경쟁영향평가 >

- ☐ 해당사항 없음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 해당사항 없음

####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 ☐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은 금전제재로 제재의 중심축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일환
- ☐ 또한, 규제대안은 위반금액에 비례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 및 위규 억제력 측면에서 현행 유지안 보다 우월
- ☐ 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할 과징금 금액도 타기관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 위반금액에 상응하는 보다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여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

####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16.5.31 ~ 7.11)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임원 등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병과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김동현
	담당부서 (과)	자본시장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태현		연락처	02-2100-2654
	과장	박민우		이메일	econokdh@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자본시장법 제422조제1항(준용조항: 제249조의9제4항, 제249조의21제4항, 제253조제5항, 제257조제5항, 제262조제5항, 제267조제5항, 제293조제4항, 제307조제4항, 제323조의20제5항, 제335조제5항, 제335조의15제5항, 제354조제5항, 제359조제5항, 제364조제5항, 제369조제5항, 제411조제5항)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금융투자 회사, 금융투자 회사 임직원 등	증권사(54개), 운용사(138개), 선물사(6개) 등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	-
5. 규제 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해당사항 없음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현행규제내용 <div>○ 자본시장법 위반 시 금융투자회사 임원 등*에 대해 해임요구 또는 직무정지 조치가 가능하나 그 병과에 대해서는 불명확</div> <div>*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임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집행사원, 집합투자기구의 감독이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원 등</div>				
	<input type="checkbox"/> 강화규제내용 <div>○ 임원 등에 대한 해임요구 시 해임요구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임요구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를 신설</div>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임원 등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해임요구 또는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동 제재를 부과				

##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임원 등\*에 대한 해임요구 시 해임요구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임요구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를 신설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임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집합투자기구의 감독이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원 등(이하 "임원")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49조의9(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 략)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 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 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9조의9(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조치)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 ----- 제42 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제3항 및 제422조의2----- ----- -----.
제249조의21(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 략)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 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 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9조의21(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 ----- -----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제3항 및 제422조의2- ----- -----.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 ④ (생 략) ⑤ 제424조 및 제425조는 집합투자 기구 및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22조의2, 제424조 -----

현 행	개 정 안
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 분) ① ~ ④ (생 략)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일반사무관 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 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제3항 및 제422조의2----- -----. -----.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 한 조치) ① ~ ④ (생 략)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집합투자기 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 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 한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제3항 및 제422조의2----- -----. -----.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 략)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채권평가회 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제3항 및 제422조의2----- -----. -----.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 략)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 다) 및 제425조는 협회 및 그 임직 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 다.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제3항, 제422조의2, 제423조 ----- -----. -----.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 략)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후단과 제3항, 제422조의2, 제423조 ----- ----- -----.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략)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제3항 및 제422조의2----- ----- -----.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략)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제3항 및 제422조의2----- ----- -----.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략)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제3항 및 제422조의2----- ----- -----.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략)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제3항 및 제422조의2----- ----- -----.

현 행	개 정 안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 략)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제3항 및 제422조의2----- -----.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 략)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제3항 및 제422조의2----- -----.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 략)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제3항 및 제422조의2----- -----.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 략)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제3항, 제422조의2, 제423조----- -----.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 ----- ----- -----.

현 행	개 정 안
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 ----- . 이 경우 해임요구와 직무정지는 병과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1.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
3. 문책경고	3. -----
4. 주의적 경고	4. -----
5. 주의	5. -----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6.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1. 규제의 필요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해임요구’의 제재를 내릴 수 있음
- 해임요구의 제재 효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가 주주총회를 거쳐 해당 임원을 해임하는 것이 필요한데, 금융회사가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등에는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존재

#### < 부당한 직무수행 관련 사례 >

- 증선위는 효성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고, 회장 조석래, 대표이사 이상운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14.7월)
  - 해임권고 조치에 따라 이사회는 해임권고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등 지체 없이 해임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 효성은 해임권고 안건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당사자는 현재까지 부당한 직무수행 중
- ⇒ '16.7.22일 서울행정법원은 해임권고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건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림

- 따라서 해임요구의 제재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명시적 병과규정이 없어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

\* 자본시장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해임요구(1호)와 직무정지(2호)를 각각 다른 호로 규정

- 다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직무정지는  
① **해임권고**(해임요구 포함)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②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 조치가 가능하고,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현행 자본시장법과 검사·제재규정만으로 임원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병과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 **침익적 제재조치임을 감안할 때,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

※ 현행 금융법규 상 해임요구와 직무정지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나, 일반적으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정지를 부과하고 있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 바. (생략)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동항제2호의 조치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조치와 동항제2호의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 임원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

##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금융질서 유지, 소비자 보호 개선에 기여
- 임원에 대하여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사전적·자발적 위법 시정기능 유도 및 위법·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기대

## 2. 대안의 발굴·검토

### 가. 고려된 대안

#### < 현행유지안 : 병과 규정 없음 >

- ☐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어 해임요구와 직무정지를 병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 비규제대안 : 해당 없음 >

- ☐ 임원의 해임요구 시부터 직무정지를 병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규제대안은 상정하기 어려움

#### < 규제대안 :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시 직무정지 병과 >

- ☐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시 해임요구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임요구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를 명확화
  - 현행 규정으로도 병과도 가능하다는 법제처 견해에 불구하고 병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논란을 해소하고, 임원에 대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

### 나. 대안의 분석

####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 해임요구와 직무정지의 병과는 제재수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대상이 아님

##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님

## < 해외사례 분석 >

- ☐ **(미국)**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는 공식 서면합의, 중지 명령, 원상회복명령, 해임 및 직무정지,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 법률에 근거\*하여,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미국 연방예금보험법(FDIA) Sec. 8(e)(3); 12 U.S.C. Sec. 1818(e)(3) : 통화 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준비제도위원회 등 각 업권별 감독기관 (federal agency)에 의해 제재가 취해지며, 해임요구시 해당 임원의 부당한 직무로부터 금융회사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직무정지가 가능

### < 미국 연방예금보험법(FDIA) Sec. 8(e)(3); 12 U.S.C. Sec. 1818(e)(3) 원문 >

####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 SEC. 8 TERMINATION OF STATUS AS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 (e) REMOVAL AND PROHIBITION AUTHORITY.

##### (3) SUSPENSION ORDER.

(A) SUSPENSION OR PROHIBITION AUTHORIZED. If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serves written notice under paragraph (1) or (2) to any institution-affiliated party of such agency's intention to issue an order under such paragraph,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may suspend such party from office or prohibit such party from further participation in any manner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 depository institution, if the agency-

- (i) determines that such action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depository institution or the interests of the depository institution's depositors; and
- (ii) serves such party with written notice of the suspension order.

- ☐ **(독일)**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과태료, 서면경고, 경고, 주의로 구분되며,

- 법률에 근거\*하여, 임원에 대한 해임요청과 함께 직무정지가 가능함

\* 독일 은행법(KWG) 제36조, 독일 보험회사감독법(VAG) 제87조 등

#### < 위임근거 검토 >

- ☐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 이해관계자 협의 >

- ☐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16.5.31 ~ 7.11)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 해임요구 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중대 위반행위를 저지른 임원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금융질서 문란, 금융회사 운영 저해 등을 시정하고자 하는 해임요구 조치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됨
- ☐ 해당 임원이 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진 또는 특수관계자인 경우 부당한 업무 수행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중대 위반행위를 저지른 임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고 제재의 형평성·적정성에도 부합하지 않음

## < 결론 >

- 해임요구와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대안은 중대 위반행위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수행의 방지, 위법 시정 기능 유도, 제재의 형평성·적정성 제고 측면에서 현행유지안 및 고려 가능한 대안보다 우수하므로 도입 필요성이 상당함

##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제재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을 생략
  - 규제비용은 규제순응에 대한 비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규제 불순응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되지 않음

####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기존 인력 및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

- 금융투자회사등의 임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직무정지 병과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인력·시일 및 예산 소요가 없음

######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병과 근거만 신설 되는 것이므로 기술적 어려움 없음

- 또한, 이미 기관제재의 경우 다수의 병과제도\*를 이미 운영해 오고 있음

\* 검사·제재규정 제29조(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제30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제31조(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시의 병과 등), 제32조(변상시의 병과) 등

######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은 임원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임

-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동일 취지에서 중대 위반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하여 해임요구와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원의 중대 위반행위에 부합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금융회사 및 임원에 대한 사전적·자발적 위법 시정기능을  
유도하고 위법·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기대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16.5.31 ~ 7.11)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